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이슈브리프

코로나19 확산과 對신남방지역 경제협력 동향
대선 이후 미국 경제정책 동향
Climate Group의 '100 프로그램'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주간 KDB리포트 Contents

이슈브리프

코로나19 확산과 對신남방지역 경제협력 동향	1
대선 이후 미국 경제정책 동향	4
Climate Group의 '100 프로그램'	6

금융시장

금리 · 환율 · 주가	8
--------------------	---

코로나19 확산과 對신남방지역 경제협력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강명구 (mgk101@kdb.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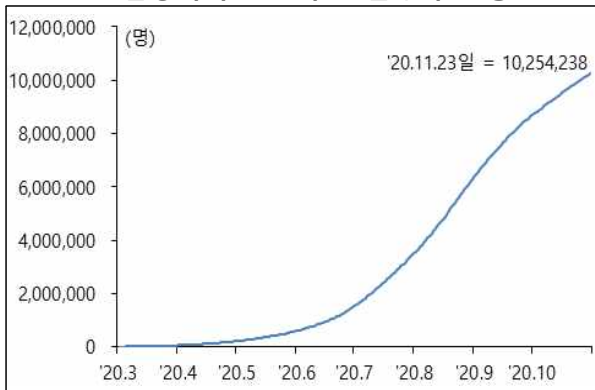
- ◆ 신남방지역의 코로나19 확산으로 증가하던 교역은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
- ◆ 그러나, 신남방지역 투자는 시장 규모와 성장성에 기반한 선별적 투자로 전년 동기 대비 10.9% 증가

□ 신남방지역*에서 코로나19는 천만명으로 전세계 확진자 중 약 17% 차지

* 신남방정책 대상국가는 아세안(싱가포르, 베트남, 인니, 말련, 태국, 필리핀,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 인도 등 11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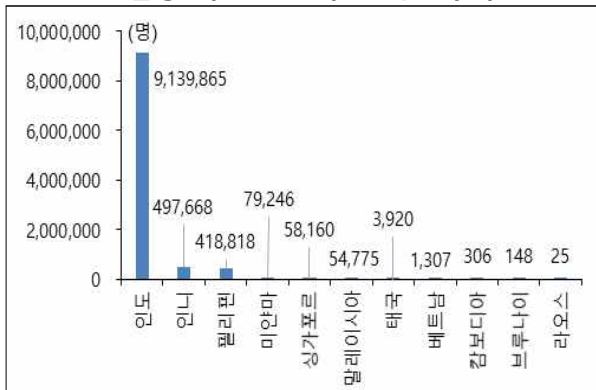
- '20.11.23일 현재 신남방지역 11개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0,254,238명으로 증가
 - 신남방지역 각국들은 국경봉쇄, 거주이전 제한 등의 정책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고 있으나 증가세
 - 신남방지역 중 코로나19 확진자 비중('20.11.23일)은 인도가 89.1%(9,139,865명), 인니 4.9%(497,668명), 필리핀 4.1%(418,818명), 미얀마 0.8%(79,246명) 순

신남방지역 코로나19 발병자 현황



자료 : CEIC

신남방 국별 코로나19 확진자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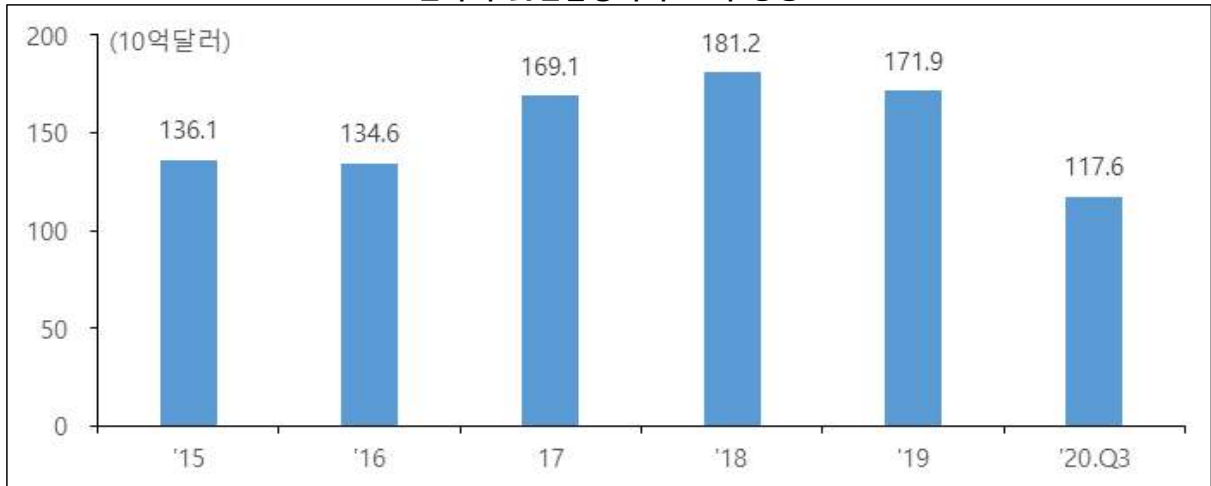
자료 : CEIC

□ 증가하던 한국의 對신남방지역 교역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감소

- '20.Q3 현재 한국과 신남방지역의 교역액은 1,175.9억달러로 '19년 동기 대비 △9.7% 감소
 - '20년 한국의 신남방지역 교역 감소는 동 지역의 국경봉쇄, 거주이전 제한 등에 따른 경제활동 위축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

- 한국의 對신남방지역 연평균 교역액증가율('15~'19년 CAGR)은 6.0%이며, '20.Q3의 교역액은 '19년 총 교역액의 68.4% 수준
 - 한국의 對신남방지역 교역액(억달러) : 1,690.7('17년) → 1,812.3('18년) → 1,719.3('19년) → 1175.9('20.Q3)

한국의 對신남방지역 교역 동향



자료 : KITA

- 한국의 對신남방지역 국가별 교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많은 인도, 인니 등이 상대적으로 급감
 - '20.Q3 국별 교역 증감률(전년 동기 대비) : 인도 △23.5%, △인니 20.4%, △필리핀 18.1%, 싱가포르 △6.4% 순

한국의 對신남방지역 국별 교역 증감률

(단위 : 백만달러, %)

	인도	인니	필리핀	태국	싱가포르	베트남	기타*	합계
'19.Q3	15,935	12,624	9,258	9,955	14,818	51,990	15,583	130,163
'20.Q3	12,188	10,047	7,580	86,90	13,889	49,902	15,295	117,591
'19.Q3 대비 '20.Q3	△23.5	△20.4	△18.1	△12.7	△6.4	△4.0	△1.9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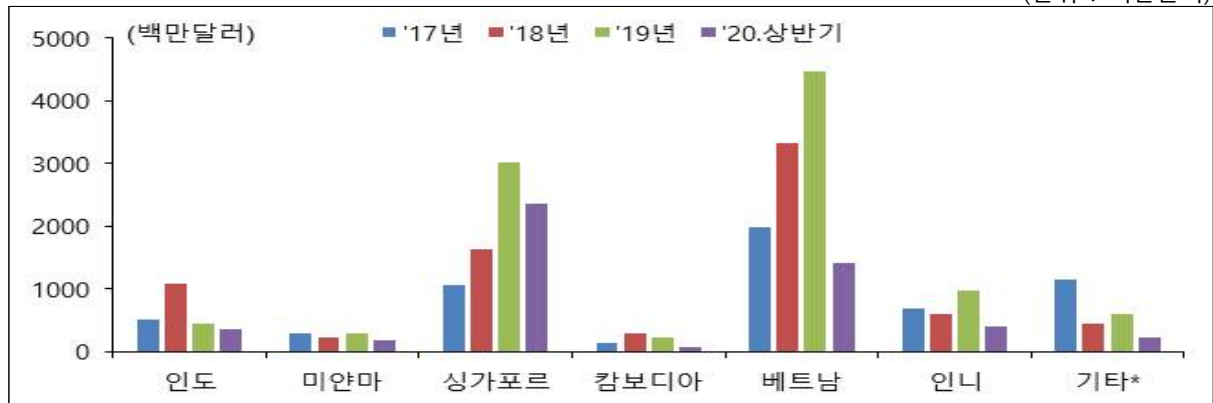
주 : 1) 증감율은 전년 동기 대비
 2) *는 브루나이, 라오스, 미얀마, 말련, 캄보디아
 자료 : KITA

□ 그러나, 對신남방지역 직접투자는 코로나19 영향에도 불구하고, 시장 규모와 성장성이 높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

- 한국의 '20년 상반기 對신남방지역 투자는 '19년 동기 대비 10.9% 증가한 49.9억달러 기록
 - 對신남방지역 투자액(백만달러) : 58.1('17년) → 75.5('18년) → 100('19년) → 49.9('20년 상반기)*
 - * '19년 상반기 45.0억달러 → '20년 상반기 49.9억달러이며, '20년 상반기 對신남방지역 총 투자액의 39.0% 수준
- 한국의 신남방지역 국별 투자는 시장 규모와 성장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투자
 - 시장 규모가 큰 인도, 신남방지역 중 제2의 베트남으로 불리는 미얀마 투자는 증가한 반면, 시장성과 성장성이 미얀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캄보디아에 대한 투자는 감소
 - '20년 상반기 국별 투자 증감률('19년 상반기 대비, %) : 인도 82.0, 미얀마 45.5, 싱가포르 26.6, 캄보디아 △30.5, 베트남 △15.3 등

한국의 對신남방지역 국별 투자 동향

(단위 : 백만달러)



주 : *는 라오스, 브루나이, 말련, 태국, 필리핀
 자료 : KITA

대선 이후 미국 경제정책 동향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윤영교 (yoonyk@kdb.co.kr)

- ◆ 美 경기부양법안은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지만 민주당과 공화당의 세부 의견 차이로 의회 통과 못한 상황
- ◆ 美 공화당이 상원 다수당 가능성 높아 향후 민주당 바이든 당선인의 정책 부담 요인이지만 경기부양법안은 바이든 정부 출범 전후로 시행 가능성 높음

□ 美 민주당과 공화당은 경기부양법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법안 미통과 상태

- 민주당 법안인 HEROES act(2.2조 달러)와 공화당 법안인 HEALS act(1.1조 달러) 모두 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상황
 - HEALS act는 '20년 7월, HEROES act는 10월에 발의했으나 구체적 사안에 차이
- 개인소득보전 정책이 경기부양에 효과적이라는 인식은 양당이 동일
 - 개인 대상 현금지원 대상 기준 및 금액에 대한 사항은 1차 경기부양법인 CARES act와 동일*하게 유지
 - * 연소득 75,000달러 이하 개인에 대해 연간 1,200달러 지급
- 개인 현금지원을 제외한 항목의 지원 기준 및 금액은 공화당이 상대적으로 보수적
 - 부양가족 현금지원, 실업급여 추가지급*, 중소기업급여무상지원에 제시한 금액은 공화당안이 민주당안의 1/3~1/2 수준
 - * 공화당은 과도한 실업급여 지급이 근로자의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 방점

코로나19 대응 미국 경기부양대책 비교(현금지원 정책 부분)

	CARES act (20.3 발효)	HEROES act (민주당)	HEALS act (공화당)
전체 규모	2조 2,000억 달러	2조 2,000억 달러	1조 1,000억 달러
현금지원	·연소득 75,000달러 이하 개인에게 연간 1,200달러 현금 지급	·CARES act와 동일	·CARES act와 동일
부양가족 현금지원	·16세 미만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500달러 지급 ·24세 미만 대학생 제외	·나이 제한 없이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1,200달러 지급, 가구 당 6,000달러 제한	·나이 제한 없이 모든 부양가족에 대해 인당 500달러 지급
실업급여	·실업급여에 주당 600달러 추가	·CARES act와 동일	·실업급여에 주당 200달러 추가
중소기업급여 무상지원프로그램	·6,650억 달러 예산을 중소기업 무상대출 형태로 지급 ·1,300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남았으나 8월 8일 종료	·CARES act 대비 추가로 300억 달러 예산 할당 ·분기별 수익이 25% 이상 감소한 200인 미만 고용 중소기업에 2차 대출 허용	·직원수가 300인 미만인 회사에 대해서만 지급

자료 : 미국 의회, KOTRA

□ 공화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은 상원, 바이든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에 부담 요인

- 대통령 선거와 동시에 진행된 상·하원 선거 결과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였으나 상원은 민주당의 안정적 장악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
 - 상원 선거 결과 공화당이 50석, 민주당이 48석을 확보, 조지아주는 과반 이상을 득표한 후보가 없어 주법(州法)에 따라 '21년 1월 5일 결선 투표 예정
- 예산은 상·하원 모두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으로, 바이든 당선인이 제시했던 경제 정책 공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
 - 오바마(민주당) 집권 2기('13~'16년) 당시 하원을 공화당이 장악*하며 정책 추진력 약화
 - * '12년과 '14년 선거에서 공화당(민주당)은 하원 의석을 각각 242석(193석)과 234석(201석) 확보
 - 바이든 당선인의 청정 에너지 부문 육성은 공화당 지지기반인 전통 제조업에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공화당과 협의 과정에서 마찰 발생 가능성 상존
 - * 청정에너지 정책 추진시 에너지 원자재 가격 하락에 의한 관련 산업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

□ 2차 경기부양안은 이르면 연내, 늦으면 '21년 2월 중 통과될 가능성

- 미국 정부는 3월 CARES act를 통해 2.2조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을 실시함으로써 기대 이상의 경기부양 효과를 거두었으나 근본적인 해결에는 접근하지 못함
 - 소비부양 효과가 있는 실업급여지원과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이 각각 7월과 8월 종료
 -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재차 증가하는 가운데 고용시장 회복은 부진*, 4분기 이후 소비 감소로 이어질 소지
 - * 미국 비농업부문 총 고용자 수(만명): 15,246('20.2)→13,030('20.4)→14,237('20.10)
- 코로나19 백신 개발이 성공하더라도 고용시장 회복에는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2차 경기부양정책에 대한 양당의 공감대 형성 가능
 - 연준은 9월 FOMC 당시 미국의 예상 실업률을 '21년 5.5%, '22년 4.6%로 제시, 고용시장 충격이 완전 해소까지 2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
 - CARES act 영향으로 '20년 미국 가계 실질가처분소득은 오히려 큰 폭으로 증가하며 소비회복을 견인, 극단적인 경기침체 장기화 방어에 기여
 - * 미국 가계가처분소득 증가율은 4월에 16.5%, 5월에 10.7%를 기록해 '00~'19년 평균치(2.5%)를 크게 상회하였으며 6~9월 증가율 역시 5.4~8.9%를 기록
 - 3분기 경제지표는 호조를 보였으나 지속성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어 이르면 연내, 늦어도 '21년 2월까지 2차 경기부양안 통과 전망 우위

Climate Group의 '100 프로그램'

KDB미래전략연구소 미래전략개발부
이 시 은 (selee@kdb.co.kr)

- ◆ Climate Group은 '기후대응 가속화'라는 미션을 가진 비영리 단체로 RE100, EP100, EV100 등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100 프로그램'을 운영
- ◆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 노력은 글로벌 공급체인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등 새로운 경제 질서로 부상

□ Climate Group은 '기후대응 가속화'라는 미션을 가지고 '03년 영국에서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 런던, 뉴욕, 뉴델리에 사무소를 두고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과 협력

- 동 기관은 기업들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움직이도록 장려하고, 같은 목표를 가진 기업들간 네트워크를 형성함으로써 이행 현황과 노하우를 공유
 - '50년까지 전세계 탄소중립을 목표로 탄소배출이 많은 에너지, 수송, 건축, 산업을 4개의 중점 추진 분야로 선정
- Under2 Coalition*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며, 매년 Climate Week NYC를 개최하여 기업, 정부, 시민사회 등과 의견을 교류하고 기후대응 업무 수행
 - * Under2 Coalition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공조하고 있는 전세계 주정부와 지역정부의 네트워크로서 글로벌 경제의 43%를 차지하고 13억 인구가 속한 220개 이상의 정부로 구성
 - 기업들과 함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정책입안, 세제혜택 등 대정부 의견도 개진

□ 기후변화 대응 가속화를 위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RE100, EP100, EV100* 등의 '100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300개 이상의 다국적 기업들이 참여중

- * RE100(Renewable Energy 100%), EP100(Energy Productivity 100%), EV100(Electric Vehicles 100%)
- 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열, 수력,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이니셔티브
 - 현재 애플, 구글, 테슬라 등 260개 이상의 글로벌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20.11월중 SK그룹 8개사, 수자원공사가 RE100 참여를 선언
 - 참여기업들이 제시한 평균 목표달성 시점은 '28년으로 이미 30% 이상 기업이 100% 목표를 달성했으며, 44%는 협력업체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구

- EP100은 기업들의 에너지 생산성*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고 청정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기 위한 이니셔티브
 - * EP(Energy Productivity) = Economic Output / Energy Input (예 : 매출액/투입에너지 기가 줄)
 - 글로벌 기후목표 달성을 위해 감축해야 하는 배출량의 40% 이상이 에너지 효율화를 통해 달성 가능*
 - * International Energy Agency('18.10월), "Energy Efficiency 2018 – Analysis and Outlook to 2040"
 - 에너지 생산성은 설비교체, 시스템 디지털화, 작업환경 및 운영방식 개선 등을 통해 개선되나, 기업들은 이를 위한 높은 초기 자본비용을 장애요인으로 지적
 - 현재 10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의 에너지 생산성은 연평균 6.1% 향상되었으며, '05년 이후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연도 대비 평균 60% 향상

- EV100은 글로벌 탄소 배출의 23%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에 있어 전기차 도입을 가속화하는 이니셔티브
 - 전기차는 유지비용이 이미 내연차보다 낮으며, 핵심부품인 배터리팩 원가가 '10~'19년중 87% 하락하는 등 판매가격도 수년 내에 경쟁력을 확보할 전망*
 - * LeasePlan의 분석('19.10월)에 따르면, 유럽내 전기차의 구매, 유지 등의 총 소유비용(TCO, Total Cost of Ownership)이 내연차 대비 평균 5% 가량 낮음
 - 현재 92개 기업이 가입중이며, '30년까지 80개국 시장에서 34만대를 전기차로 전환하고, 3,200여개 지역에 충전소 설치를 약정
 - 상업용 밴, 대형 트럭 등을 중심으로 한 전기차 공급 부족을 장애요인으로 지적

'100 프로그램' 참여기업들의 이행 의무

구분	이행 의무
RE100	-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을 '30년까지 최소한 60%, '40년까지 90%, '50년까지 100%로 확대하는 목표를 수립하고 이행
EP100	- 기업이 자체적으로 정한 기준연도('05년 이후) 대비 25년 내에 에너지 생산성 2배(100%) 향상 - 10년내 에너지관리 시스템 시행 및 목표 이행 - 소유·점유·개발 중인 건물의 탄소중립 이행
EV100	- '30년까지 직원·고객 대상의 수송수단을 전기차로 전환(3.5톤 미만 100%, 3.5~7.5톤 50%) - 직원·고객의 전기차 사용 편의를 위한 충전소 확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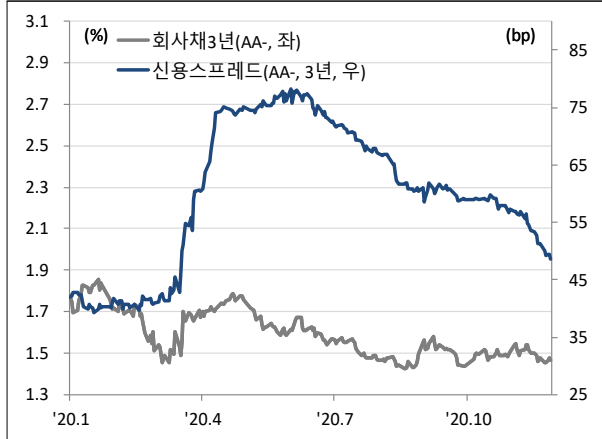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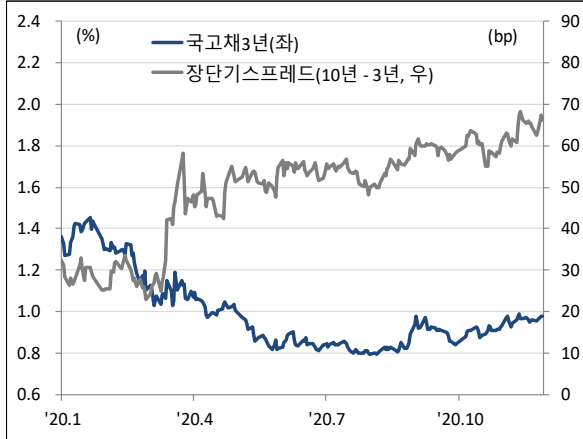
자료 : Climate Group, "RE100 Progress and Insights Report('19.12월)", "EP100 Progress and Insights Report('20.11월)", "EV100 Progress and Insights Report('20.2월)"

□ '21년 파리협약*에 따른 신기후체제가 도래하는 가운데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영업전략은 새로운 경제 질서로 부상

- *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C 이하로 유지하고, 1.5°C로 제한하는 것을 노력목표로 설정
- 글로벌 기업들의 기후대응 영업전략은 글로벌 공급체인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금리 · 환율 · 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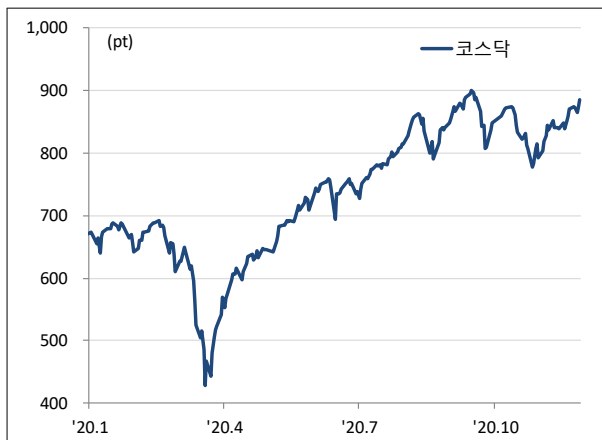
금리 국고채3년 0.979% (1.6bp ↑), 신용스프레드 48.7bp (2.5bp ↓)



환율 원/달러 1,103.2원 (11.1원 ↓), 엔/달러 104.61엔 (0.78엔 ↑)



주 가 코스피 2,633.45pt (3.13% ↑), 코스닥지수 885.56pt (1.77% ↑)



* ()는 전주대비 상승 ↑, 하락 ↓

주간 KDB리포트

Weekly KDB Report

제905호

주간 KDB리포트는 인터넷에서 찾아보시거나 이메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인터넷 rd.kdb.co.kr, kdb.co.kr
문의 787.7818

본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의견으로 당행의 공식입장이 아닙니다. 본 리포트의 저작권은 한국산업은행에 귀속되며, 원고의 무단전재, 복제, 배포 등 저작권 전반에 관한 침해 행위를 금합니다.